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Global SME Policy Trend

- 📍 **스페셜리포트** 중국의 '대중창업·만중혁신' 추진과 세제 지원
- 📍 **해외동향** 독일, 중소기업 전략의 기초는 '평가지원-부담 완화' (등 14건)
- 📍 **주요일정** Hypergrowth(미국 샌프란시스코, 2019.11.18.) (등 6건)



목 차

I. 스페셜리포트

중국의 ‘대중창업·만중혁신’ 추진과 세제 지원

요약	1
1. 서론	2
2. ‘대중창업·만중혁신’ 추진 과정과 성과	3
3. ‘대중창업·만중혁신’ 세제 지원 내용	7
4. 맺음말	13

II. 해외동향

〈미국〉

1. 미국,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과제는 적절한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14
2. 미국, 마이크로기업 R&D 지출의 90%는 비제조기업이 시행	15
3. 미국, 고성장기업이 순고용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	16
4. 미국 뉴욕시, 중소기업 우선정책 정책 통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	17

〈EU〉

1. EU, 중소기업 중 86%가 GDPR을 준수	18
-----------------------------------	----

〈독일〉

1. 독일, 중소기업 전략의 기초는 ‘평가-지원-부담 완화’	19
---	----



목 차

〈일본〉

1. 일본, 중소기업과 대학 간 산학연계는 증가 추세 20
2. 일본, 중소기업 근무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1.9% 21
3. 일본, 행정수속 비용 20% 삭감 추진 22
4. 일본, 채용난으로 인재 채용 방식 변화 23
5. 일본, 근무방식 개혁과 ICT를 통한 코워킹 스페이스 확대 24

〈중국〉

1. 중국, 세계 2위 유니콘 기업 보유국으로 성장 25
2. 중국, 산업집적으로 통한 기술진보가 혁신을 추동 26

〈동남아시아〉

1. 동남아시아, 디지털화를 통한 중소기업 연결 필요 27

III. 주요일정

1. EntreLeadership Master Series(미국 네슈빌, 2019.11.3.~7) 28
2. Web Summit (Lisbon, 2019.11.4.~7) 28
3. Ignite 19 Europe(스페인 바르셀로나, 2019.11.13.~15) 28
4. 9th Philippine SME Business Conference 2019(필리핀 마닐라, 2019.11.13) ... 29
5. Hypergrowth(미국 샌프란시스코, 2019.11.18) 29
6. Slush(핀란드 헬싱키, 2019.11.21.~22) 29



중국의 '대중창업·만중혁신' 추진과 세제 지원

요 약

- '1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이하 상창(双创))'을 언급하면서, 다수 민간에 의한 창업이 경제혁신 방안으로 부상
 - 중국 정부는 '상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가세무총국이 새로운 <'대중창업·만중혁신'세금우대정책지침('大衆創業 万众創新' 稅收優惠政策指引))을 발표
- 중국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철폐 및 정부권한 이양 등을 추진
 - 창업 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을 완화·폐지하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축소
 - '17년 6월에는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大衆創業 万众創新 示範基地)' 건설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18년 9월 26일에는 '혁신 창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과 '상창(双创)' 업그레이드 버전 구축에 관한 의견(國務院關於推動創新創業高質量發展打造“双创”升級版的意見)'을 발표
 - '19년 6월에는 대중창업 만중혁신 촉진 5대 방안을 발표해 '상창' 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강조
- 중국 정부는 그동안 '상창' 활동 지원을 통해 중국의 혁신 환경이 개선되고, 고용이 증대하였으며, 혁신과 창업 플랫폼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관리 감독 능력 강화와 권한 이양의 양립,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정부 개혁이 지속 심화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 혁신과 창업 활동은 직접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고용이 증가
 - 혁신과 창업에 대한 지원의 초점은 혁신적인 자원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개방형 혁신 창업 공공 서비스 시스템은 초기 형태를 구축
 - 벤처캐피탈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제 지원 등에 따라 전략적 신흥산업 및 초기 단계에 대한 투자가 집중
- 중국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지원 정책을 추진
 - '상창(双创)'을 지원하는 세금우대 정책은 총 80여 개로 창업 초기, 성장기, 성숙기 등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지원
 -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대중 창업·혁신을 지원하는 각종 세금 우대 정책에 따른 감세규모는 3,900억 위안(약 66조 7,000억 원)

【원 문】

- 国家税务总局, “大衆創業 万众創新” 稅收優惠政策指引, 2019.6.19

1 서론

- '1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대중창업 만중혁신(大眾創業 萬眾創新, 이하 쌍창(双创))'을 언급, 다수 민간에 의한 창업을 경제혁신 방안으로 강조함
 - 리커창 총리는 민간 주도의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 개혁 및 지원 확대를 시행할 것을 선언함
- 창업 활성화는 중국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층 고용을 늘리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창업을 통해 취업을 이끌고 '쌍창'업그레이드 버전을 실시해 신산업과 신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힘
 - 올해 중국의 취업 상황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쌍창(双创)'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쌍창' 활동 활성화로 중국의 유니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발표된 중국 후룬연구소(胡潤研究院)의 '2019년 1분기 중화권 유니콘 기업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유니콘 기업 수가 처음으로 200개를 돌파함¹⁾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월 기간 21개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으며, 이것은 지난해 동기 대비(11개) 10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임
 - 사이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만에 21개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며 '향후 3년 내 70개의 기업이 유니콘 대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 정부는 '쌍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가세무총국이 새로운 <'대중창업·만중혁신'세금우대정책지침(大眾創業 萬眾創新 稅收優惠政策指引)>을 발표하였음
 - '쌍창(双创)'을 지원하는 세금우대 정책은 총 80여 개로 기업 창업 초기, 성장기, 성숙기 등 3단계에 걸쳐 지원하고 있음

1) 더벨류뉴스, 중국 유니콘 기업 200개 넘었다...창업 열풍, 2019.5.14

② ‘대중창업·만중혁신’ 추진 과정과 성과

(1) 추진 과정

- 중국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철폐 및 정부권한 이양 등을 추진함
 - 창업 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을 완화·폐지하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축소함
 - '14년 창업에 필요한 3개 증서(사업자등록증, 기업등록코드, 세무등기증)를 하나로 통합하는 삼증합일(三證合一)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16년에는 추가로 사회보험, 통계등기증도 통합하는 오증합일(五證合一) 제도를, '17년 4월에는 창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사업자등록증 하나에 통합하는 다증합일(多證合一) 제도를 실시하였음
 - '15년 5월에 국무원은 117개 행정심사허가권을 하부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였음
 - '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창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임을 강조함

〈표 1〉 중국 창업 환경 개선 정책의 주요 내용

방향	주요 내용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 및 신용체계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보호제, 징벌적 배상제도 실시 • 지식재산권 관련 공공서비스 및 플랫폼 구축 • 독점행위 개혁 실시, 반독점법 집행 강화 • 산업 네거티브리스트 시행을 통해 다양한 창업 유도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90개의 행정심사 취소 및 이양 • 법인 및 기타 조직을 대상으로 한 비행정 허가 심사 전면 취소 등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체제 개혁 • 과학기술 성과 확산 촉진, 효율적인 연구체계 구축 등
인력양성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관련 교육과정 신설, 커리큘럼 개선
해외 우수 인력의 귀국 후 창업 편의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유치제도 개선(외국인 영구 거주, 기술이민제도 수립 등)

자료 : 한국은행, 중국의 창업 활성화 배경과 시사점, 2018.1.5

- '17년 6월에는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 건설을 최종 확정하였음
 - 우수한 창업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특색이 명확하며 시범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 기업 중,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 약 100개를 선정할 계획을 담고 있음

- (지역 시범기지) 혁신·창업 정책체계를 완비하고, 정책 서비스플랫폼을 조직하여 투자·용자 경로 부족, 정책이 기층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며, 우수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형성함
-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 시범기지) 과학기술 성과전환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인재양성, 성과전환, 공공연구개발 서비스 등 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과학연구 인력의 혁신동력 부족, 혁신교육 부족, 인재 양성 및 교류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함
- (기업 시범기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실물경제를 부양시키며, 기업 내부인력 혁신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및 기업간 데이터·혁신자원 공유 플랫폼의 수립을 통해 대기업의 조직규모 고착화, 혁신활력 부족, 혁신창업 자원이 공유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함

□ '18년 9월 26일에는 '혁신 창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쌍창(双创)' 업그레이드 버전 구축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을 발표함

- 주요 목표는 △혁신 창업 서비스 향상, △창업의 취업 선도 능력 향상,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활용 강화, △고품질 혁신 창업 집결구 설립,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가치사슬의 유기적 융합 추진, △국내외 혁신 창업 자원의 융합 강화 등임

□ '19년 6월에는 대중창업 만중혁신 촉진 5대 방안("双创"引向深入的五项措施)을 발표 하였음²⁾

- 첫째, '쌍창'의 취업 지원 작용을 발휘해 대학 졸업생, 퇴역군인 등 주요 그룹의 취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함
 - '팡관푸'³⁾ 개혁을 심화하고,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창업 혁신 비용을 낮춤
- 둘째, '쌍창'의 과학기술혁신 기능을 발휘해, '쌍창' 시범기지의 과학연구 프로젝트 실시, 성과 확인 및 이전 등을 선행 실시하고, 연구개발비용의 75%를 가속 상각함
- 셋째, '쌍창'플랫폼 구축을 지지해, 대중소기업의 연합 발전을 촉진함
 - 주식 및 성과금과 같은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모든 유형의 기업 간 협업 혁신을 촉진함
- 넷째, '인터넷 +' 업그레이드를 촉진, 산업인터넷 발전을 촉진하고, 의료, 양로, 교육 등 사회영역에서 '인터넷 +' 응용을 확대함

2) 中国高新网, 我国将出台五大举措促进“双创”, 2019.6.6.

3) 팡관푸(放管服)란 행정기구의 간소화, 관리와 자유의 결합, 최적화된 서비스의 줄임말이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각종 간섭의 축소를 의미하는 규제개혁 방향을 가리킴

- 다섯째, 중소기업의 대출 실질 이자율 및 종합 코스트를 낮출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유도함
 - 중소기업 부실대출 용인도를 2%에서 3%로 완화하고, 리스크 투자를 장려해 벤처캐피탈의 '쌍창' 지지를 강화함

(2) 성과

- 중국 정부는 그동안 '쌍창' 활동 지원을 통해 중국의 혁신 환경이 개선되고, 고용이 증대하였으며, 혁신과 창업 플랫폼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⁴⁾
 - (혁신과 창업 환경 최적화)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관리 감독 능력 강화와 권한 이양의 양립,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정부 개혁⁵⁾이 지속 심화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온라인으로 심사비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不见面审批), 한번만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절차 진행이 완료되도록 하며(最多跑一次), 하나의 인터넷 망으로 다수 행정기관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一门式一网) 개혁함
 - 세계은행의 '2019년 비즈니스 환경 보고'에 의하면 중국의 '18년 비즈니스 환경 평가 순위는 46위로 전년도에 비해 32계단 상승하였음
 - (창업에 따른 고용 활력 지속) 혁신과 창업 활동은 직접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 '18년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기업은 670만 개, 일평균 신설 기업수는 1.8만개로 각각 전년대비 10.3%, 8.43% 증가하였으며, 전국 도시의 신규 일자리는 1,361만 명을 기록함
 - (혁신과 창업의 과학기술 주도성 명확) 혁신과 창업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고 있음
 - '18년 국가 첨단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대비 각각 11.7%, 8.9% 증가해, 일정 규모 이상 공업기업⁶⁾보다 5.5% 포인트, 2.7% 포인트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혁신과 창업 플랫폼 지속 개선) 혁신과 창업에 대한 지원의 초점은 혁신적인 자원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개방형 혁신 창업 공공 서비스 시스템은 초기 형태를 갖추게 되었음
 - 120개의 '쌍창(双创)' 시범기지가 점차 지역의 혁신기지가 되고 있으며, 대중창업공간(众创空间)이 6,900개를 넘었고,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수가 4,800개를 초과하였음

4) 发展改革委网站, 发展改革委就“2019年全国大众创业万众创新活动周”有关情况答问, 2019.5.27

5)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9년 6월 25일 “放管服(放管服)” 개혁의 심화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화상회의를 통해放管服 개혁의 심화와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의 조성을 지시.

6) 연간 매출액이 2천만 위안 이상인 공업 법인기업을 가리킴

- (벤처캐피탈 투자 지속 강화) 벤처캐피탈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지원 등에 따라 전략적 신흥산업 및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18년 말까지 벤처캐피탈 투자는 약 2.4조 위안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음
 - 올해 4월 말 현재, 국가신흥산업창업투자유도기금(国家新兴产业创业投资引导基金)은 이미 356개의 벤처캐피탈 펀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총 4,445개의 신흥 산업 분야 기업을 지원하였음
- (창업과 혁신 정신 강화) '쌍창' 활동 주간과 '창향중국(创响中国)' 등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혁신과 기업가 공모전을 전국적으로 열어 사회 전체에 강력한 혁신 분위기를 조성함
 - 2019년 전국 '쌍창'활동 주간은 6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주제는 '쌍창 활력 결집, 발전 동력 팽배(汇聚双创活力, 澎湃发展动力)'였음
- '16년 이후 건설되기 시작한 '쌍창' 시범기지도 혁신과 창업을 촉진하고 고품질의 발전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18년에 지역 시범기지의 신생 기업은 71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기업, 대학 및 연구소의 시범에서 겸직 창업가는 약 2,400명으로 각각 약 32% 및 49% 증가했음
 - 지역 시범기지의 기술 계약 매출은 72억 위안이며, 대학 및 연구소 시범 거점 전환의 매출액은 7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함
 - 지역 시범기지의 신규 등록기업은 약 41만 개였으며, 약 6,700개의 새로운 하이테크 기업이 증가해 각각 1.15%와 31% 증가했음
 - '18년 '쌍창' 시범기지에는 2,600개가 넘는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추가되었음
 - 또한 각종 혁신 창업 대회가 3,200회 이상 개최되었고, 수십만 명의 혁신 창업가들이 참여함
- '중국창업인큐베이터발전보고 2019(中国创业孵化发展报告2019)'에 의하면 '18년 현재 전국 창업 인큐베이터는 1만 1,808개에 달함⁷⁾
 - 인큐베이터 내에 소재한 기업 및 단체 수는 62만개에 달하며, 2만 9천개의 기업이 670억 위안의 투자를 받았음
 - 창업 및 취업인 수는 395만 명을 넘었으며, 대학생 취업자 수도 46만 명에 달하고, 유효 지식재산권 수도 65만 개 이상임

7) “数说”中国创业孵化发展全貌——解读《中国创业孵化发展报告2019》，2019.6.19

③ '대중창업·만중혁신' 세제 지원 내용

- 중국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대중 창업·혁신을 지원하는 각종 세금 우대 정책에 따른 감세규모는 3,900억 위안(약 66조 7,000억 원)임⁸⁾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8% 급증한 수준이며, 이 중 신규 정책에 따른 감세 금액은 약 680억 위안(약 1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됨
 - 이러한 정책 효과는 기업 생산·경영 단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5월 하이테크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지난해 5월 대비 9.4% 증가했으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한화 약 34억 원 이상) 공업기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4.4%p 초과하는 실적임
- 지난 6월에는 국가세무총국이 새로운 <'대중창업·만중혁신'세금우대정책지침('大众创业万众创新'税收优惠政策指引)>을 발표하였음
 - 이것은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이 혁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89개 항목의 세금 우대 정책을 종합한 것임
 - '쌍창(双创)'을 지원하는 세금우대 정책은 창업 초기, 성장기, 성숙기 등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지원하고 있음

(1) 창업 초기 단계

- 소형(小型)기업, 중점 그룹 및 특수 조건의 개인 창업, 취업, 취업 플랫폼, 창업 투자기업 및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금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소형저이윤(小型微利)기업⁹⁾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增值稅)¹⁰⁾ 면제, 기업소득세 면제, 고정자산 가속 상각 등의 혜택을 제공함
 - (부가가치세 면제) 월 판매액 2만 위안~3만 위안(분기 9만 위안)의 기업 및 개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8) 중국경제, 中 '대중창업, 만중혁신' 정책 효과 up, 2019.6.24

9) 소형저이윤(小型微利)기업은 공업기업의 경우 연간 납세소득액 50만 위안 이하, 종업원수 100명 이하, 자산총액 3천만 위안, 기타 기업의 경우 연간 납세소득액 50만 위안 이하, 종업원수 80명 이하, 자산총액 천만 위안 이하인 기업

10) 중국 총 세수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수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임. 세율은 우리나라와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기업 규모,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조정해 적용

- (기업소득세 면제)¹¹⁾ '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납세소득액 50만 위안 이하의 소형저이윤기업에 대해 과세소득을 50% 감면하고 기업소득세율은 20%로 인하함
- (중점산업 소형저이윤 기업 고정자산 가속 상각) 6대 산업의 소형저이윤기업이 '14년 1월 1일 이후 새로 구입한 연구개발 및 생산경영 공용 장비, 설비의 단위가격이 1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1회성 당기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납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함
 - 대상 기업은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특수장비 제조업, 철도, 선박, 항공우주 및 기타 운수설비 제조업,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계측기제조업, 정보전달,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등 6대 산업, 경공, 방직, 기계, 자동차 등 4대 분야 중점산업의 소형저이윤기업임
 - 10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상각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속상각을 채택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할 경우 최소 감가상각 기간은 기업소득세법에 규정된 감가상각 기간의 60% 이상이어야 함

□ 중점그룹 창업과 고용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함

- (중점 그룹 창업 세금 공제) 자영업자의 경우 3년 동안 매년 8천 위안 한도로 당해 연도의 부가가치세, 도시 유지보수 건설세, 교육비부가세, 지방교육부가세 및 개인 소득세를 공제하며, 최고 20%까지 증액 가능함
 - 정책 시행 기간은 '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19년 12월 31일에 만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3년이 될 때까지 혜택을 제공함
- (중점그룹 고용 세금 공제) 3년 동안 실제 고용인원 수에 따라 1인당 매년 4천 위안씩 당해연도의 부가가치세, 도시 유지보수 건설세, 교육비부가세, 지방교육부가세 및 기업 소득세를 공제하며, 최고 30%까지 증액 가능함
- (퇴역 군인 창업 세금 공제) 자영업 퇴직 군인의 경우 3년 동안 매년 8천 위안 한도로 당해연도의 부가가치세, 도시 유지보수 건설세, 교육비부가세, 지방교육부가세 및 개인소득세를 공제하며, 최고 20%까지 증액 가능함
- (퇴역 군인 취업 기업 세금 공제) 퇴역 군인을 새로 채용한 소형기업은 3년 동안 1인당 4천 위안씩 당해연도의 부가가치세, 도시 유지보수 건설세, 교육비부가세, 지방교육부가세 및 기업소득세를 공제하며, 최고 50%까지 증액 가능함

11)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해당하며 세율은 일반적으로 25%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20%, 국가 중점육성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15%의 특별세율을 적용

- 창업 취업 플랫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세 면제 등의 세금 우대 조치를 실시함
 -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중창공간 포함) 부가가치세 면제) '16년 5월 1일부터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중창공간 포함)가 인큐베이팅 기업에 대해 임대한 장소, 사무실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인큐베이터 제공 부지 면적이 인큐베이터 지배 면적의 75% 이상이어야 하며, 인큐베이팅 기업 수가 인큐베이터 내 기업 총수의 75% 이상이어야 함
 -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부동산세 면제) '16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조건에 부합하는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가 사용하거나 인큐베이팅 기업에 무상 또는 임대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세를 면제함
 - (국가대학과학기술원 부가가치세 면제) '16년 5월 1일부터 국가대학과학기술원이 인큐베이팅 기업에 대해 임대한 장소, 사무실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제공한 부지 면적이 국가대학과학기술원 지배 면적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인큐베이팅 기업 수가 국가대학과학기술원 내 기업 총수의 75% 이상 이어야 함
 - 비영리기관 조건에 부합하는 대학과학기술원의 수입에 대해 기업소득세 면제, 국가대학과학기술원 부동산세 면제, 도시토지사용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함
- 벤처캐피탈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의 세금 우대를 실시함
 - (벤처캐피탈 투자 비상장 중소 하이테크기술기업 소득액 공제) 중소 하이테크기업 투자 금액의 70%에 대해 주식 소유 만 2년이 되는 연도에 창업투자기업의 소득액을 공제함
 - 당해연도에 공제액이 부족할 경우 이후 납세연도로 이월 공제가 가능함
 - (엔젤투자자의 초기 혁신과학기술형 기업 투자에 대해 소득액 공제) 엔젤투자자가 초기 혁신과학기술형 기업¹²⁾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직접 만 2년 투자한 경우 주식 취득 투자액의 70%를 공제함

12) 초기 혁신과학기술형 기업은 투자를 받을 시점에 종업원수 200명 이하,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의 종업원 비중 30% 이상, 자산총액 과 연 매출액 3천만 위안 이하, 설립 후 5년 이내(60개월), 연구개발비 비중 2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2) 성장 단계

-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고정자산 가속 상각, 설비구매에 대한 세금 우대, 과학기술성과 이전에 대한 세금 우대, 과학연구기관 혁신인재에 대한 세금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함
- 연구개발비에 대해 가속 공제를 실시함
 - (연구비용 가속 공제)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 수행 중 실제 발생한 비용, 당기손익에 포함된 아직 형성되지 않은 무형자산은 규정에 따른 실제 공제를 근거로 해서 올해 실제 발생액의 50%를 올해 과세 소득액 중에서 공제함
 - 연구개발 활동 중 실제 발생한 연구비용이 무형자산을 형성한 경우 무형자산 비용의 150%를 세전 상각함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¹³⁾ 연구개발비용 가속 공제) '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활동 중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당기손익에 계산된 미형성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액의 75%를 세전 가속 공제함
 -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무형자산 비용의 175%를 세전 상각함
- 고정자산에 대해 가속 상각을 실시함
 - (고정자산 가속 상각 또는 일회성 공제) '14년 1월 1일 이후 모든 기업이 새로 구입한 연구개발 기기, 설비 중 단위 가격이 1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1회성 비용으로 처리해 당기 납세 소득액에서 공제함
 - 단위가격이 10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속 상각을 채택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소 감가상각 기간은 기업 소득세법에 명시된 감가상각 기간의 60% 이상이어야 함
 - 모든 기업이 소유한 단위가격 5천 위안 이하의 고정자산에 대해 1회성 비용으로 처리해 당기 납세 소득액에서 공제함
 - (중점산업¹⁴) 고정자산 가속 상각) 6대 산업은 '14년 1월 1일 이후 새로 구입한 고정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속 상각을 할 수 있음
 - 4대 분야 중점 산업의 경우 '15년 1월 1일 이후 새로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속 상각을 할 수 있음
 -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소 감가상각 기간은 기업 소득세법에 명시된 감가상각 기간의 60% 이상이어야 함

13) 종업원수 500인 이하, 연간 매출액 2억 위안 이하, 자산총액 2억 위안 이하인 기업

14)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특수장비 제조업, 철도, 선박, 항공우주 및 기타 운수설비 제조업,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계측기제조업, 정보전달,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등 6대 산업, 경공, 방직, 기계, 자동차 등 4대 분야 중점산업

□ 조건에 부합하는 설비 구매에 대해 세금 우대 조치를 실시함

- (중대 기술장비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16년 1월 1일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생산을 위해 '국가지지 중대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에 열거된 장비 또는 제품, 그리고 수입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중대기술장비 및 제품 수입 핵심 부품 및 원재료 제품 목록'에 열거된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과학연구기관, 기술개발기관, 학교 등이 수입하는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제) '16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과학연구기관, 기술개발기관, 학교 등이 수입하는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¹⁵⁾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함

□ 과학기술성과 이전 소득 등에 대한 세금 우대를 실시함

- (기술이전, 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세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기술이전, 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 감면) 1개 납세연도 내에 기술이전 소득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함

□ 과학연구기관 혁신인재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 개인소득세 납부 연기, 분납 등을 실시함

- 또한 비상장 회사 주식 옵션, 주식 옵션, 제한 주식 인센티브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이연 지불, 상장회사 주식 옵션, 제한된 주식 및 인센티브에 대한 납세 기한 연장, 기업과 개인 기술성과 투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이연 등의 우대 조치를 실시함

(3) 성숙 단계

□ 첨단기술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애니메이션 기업, IC 기업 등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를 실시함

□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율 인하, 종업원 교육경비 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함

- (첨단기술기업 기업소득세율 15%로 인하) 국가 중점 지원 첨단기술기업은 기업소득세율을 15%로 인하함

15)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

- 첨단기술기업이 갖추어야할 조건 : 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인원이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최근 일년간 첨단기술제품(서비스)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 (첨단기술기업 종업원 교육경비 세전 공제) 첨단기술기업 종업원 교육경비 지출, 임금 총액의 8%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납세 소득세액 계산 시 공제, 초과하는 부분은 이후 납세 연도에 공제할 수 있음
 -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기업소득세 우대)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업소득세율을 15%로 인하함
 -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종업원이 전체 종업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 취득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함
- 소프트웨어기업, 애니메이션 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혜택을 제공함
- (소프트웨어산업 부가가치세 초과 세 부담 즉시 환급) '11년 1월 1일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납세자는 17%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부가가치세 실제 세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즉시 환급함
 - (신설 소프트웨어 회사 기업소득세 정기 감면) 신설 소프트웨어 기업은 1년에서 2년은 기업소득세 면제, 3년에서 5년에 걸쳐 법정 25%인 기업소득세를 반액 감면함
 - 국가규획 내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은 기업소득세율을 10%로 인하하고, 소프트웨어 기업 종업원 교육비용 과세 소득 공제, 기업 외부 구입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단축 상각 또는 상각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함
- 집적회로(IC)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이월공제세액 환급, 기업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
- (IC 중대 프로젝트 부가가치세 이월공제세액 환급) '11년 11월 1일부터 국가 비준 IC 중대 프로젝트 기업이 구매한 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말 이월공제세액을 환급함
 - (IC회로 라인폭 0.8마이크론 미만인 IC 회로 생산기업 기업소득세 정기 감면) 제1년부터 2년까지는 기업소득세 감면, 제3년~5년까지는 25%인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함
 - 또한 라인폭 0.25마이크론 미만 IC회로 생산업체와 80억 위안 이상 투자한 IC회로 생산 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15%로 인하함
 - (라인폭 0.25마이크론 미만 IC회로 생산업체의 기업소득세 정기 감면)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제1년~5년까지는 기업소득세 면제, 제6년~10년까지는 25%인 기업 소득세를 반액 감면함

- (80억 위안 이상 투자 IC회로 생산기업 기업소득세율 정기 감면)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제1년~5년까지는 기업소득세 면제, 제6년~10년까지는 25%인 기업소득세를 반액 감면함
- (신설 IC회로 설계기업 기업소득세 정기 감면) 제1년~2년까지는 기업소득세 면제, 제3년~5년까지 25%인 기업소득세를 반액 감면함
- 이외에도 IC회로 설계기업 종업원 교육비 공제, IC회로 생산기업 생산설비 상각 기간 단축(최단 3년) 등의 혜택을 제공함

4) 맺음말

- 중국의 ‘쌍창’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세금 우대 정책은 제조 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춰 기업의 혁신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구조전환과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팡관푸 개혁이 확대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어 ‘쌍창’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신규 취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⁶⁾
 - 올해 1~5월 전국 도시 신규 취업자는 597만 명으로 목표의 54%를 달성함
 - 신규 등록기업은 286만 개로 1일 평균 1만 8,900개가 증가했으며, 신규 등록 개인사업자는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해 신성장동력 발전이 취업 안정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쌍창’ 지원은 향후에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이를 배경으로 중국 기업들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이 향상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입지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신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혁신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

16) CSF, 중 창업·혁신 지원 정책 추진 성과와 개선점, 2019. 7.5

II 해외동향



1 미국,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과제는 적절한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 골드만삭스는 중소기업 오너 2,285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기업 환경, 특히 규제, 노동력 및 자본 환경이 기업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조사
 - 대상 중소기업은 '1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골드만삭스 10,000 중소기업 프로그램 (Goldman Sachs 10,000 Small Businesses)에 참여하는 기업
 - 골드만삭스의 10,000 중소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는 8,600개 이상이며, 프로그램 완료 후 매출액 및 고용이 증가
-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과제는 적절한 역량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 고용 및 유지인 것으로 조사
 - 응답자 중 76%가 적합한 근로자를 유치, 고용, 유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2/3 정도가 지원자 중 적절한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응답
 - 응답자들은 기술적 역량 및 근무 경험 이외에 긍정적 태도(59%), 학습 의욕(49%), 진실성(46%)과 같은 소프트 역량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응답
- 응답자의 60% 이상이 규제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 다양한 유형의 규제 중 노동법(임금요건, 복지, 비자 등)에 대한 지적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헬스케어법(26%), 조세 준수(20%) 등이 차지
 - 규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43%가 비용, 복잡성 및 관련 투입 시간 등을 모두 지적
 - 1/3 이상은 규제 준수 비용이 복잡성과 관련 투입 시간보다 더 큰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규제와 관련해 주당 평균 6시간(연간 300시간)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고 응답
- 중소기업들은 헬스케어, 훈련 및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투자하고 있으며 88%는 전문적인 개발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

▶ 자료 : 미국, 중소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Voice of Small Business in America: 2019 Insights Report), Goldman Sachs, 2019.9

② 미국, 마이크로기업 R&D 지출의 90%는 비제조기업이 시행

- '16년 미국 마이크로기업(종업원 1~4명)의 R&D 지출은 48억 달러이며, 이중 비제조기업이 43억 달러(89%)를 실시
 - 마이크로기업 R&D 지출의 74%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종업원 5명 이상 기업에서 R&D 지출의 67%가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가 전체 R&D 지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과 대비
- 마이크로기업 R&D 지출의 53%는 개발에서 이루어졌으며, 38%는 응용연구, 8%는 기초 연구에서 시행
 -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 5명 이상 기업과는 차이가 존재
 - 5명 이상 기업의 경우 R&D 지출의 77%는 개발, 16%는 응용연구, 7%는 기초연구에 대해 시행
- R&D 자금 조달 유형을 보면 78%는 회사 내부 자금을 이용하였으며, 다른 미국회사와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 자금이 각각 8%를 차지
 - 마이크로기업 R&D에 대한 전체 정부 자금의 49%는 과학 R&D 산업(scientific R&D industry group)에 배정
- R&D 지출의 56%가 급여, 임금 및 복지를 위해 사용되며, 10%는 장비, 5%는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구입에 사용
 - 마이크로기업 중 소수 기업만이 R&D 수행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R&D 기업은 오너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의 51%가 R&D 관련 업무를 수행
- 마이크로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경쟁우위를 제공하려면 가격보다는 품질이 중요하다고 응답
 - 88%는 평판(reputation)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5%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이 중요하다고 응답

▶ 자료 : 미국, 마이크로기업의 R&D 실시 현황(Microbusinesses Spent \$4.8 Billion on R&D Performance in the United States in 2016, According to New Survey), NCSES, 2019.9

③ 미국, 고성장기업이 순고용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

- '16년 기준 기업 규모별 고용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종업원 500명 미만)이 전체 고용의 47.3%를 차지
 - 종업원 20명 미만의 기업은 전체 고용의 16.6%를 차지하고, 대기업(500명 이상)이 전체 고용의 52.7%를 차지
 - '11년부터 '18년까지 중소 사업장(평균 종업원 수 500명 미만)이 미국 전체 순 고용 증가의 2/3 정도를 차지

- 최근까지 경제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대체로 동등하지만 고용 창출과 감소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중소기업이 순 신규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 예를 들어, '10년 미국중소기업청(SBA) 연구에 의하면 이전 15년간 중소기업이 민간 부문 순 고용 창출의 65%를 차지
 - 그러나 기업과 사업장 수명주기에 관한 데이터 이용성이 향상되고, 고용 창출과 기업 규모 관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이 순 고용 창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견해가 도전받고 있는 상황

- 고성장(high-impact) 기업의 비중은 5~6% 정도이지만 순 고용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
 - '80~'11년 인구조사국 고용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 의하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종업원이 많은 14개 산업의 신생 기업(업력 1~5년)이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

- 순 고용 창출 동학에 대한 현재의 경제 연구는 순 고용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기업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에 대한 확정적인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소규모 스타트업, 특히 적어도 종업원 20명 이상인 기업은 젊은 생존 기업(1~5년 운영)과 마찬가지로 순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

▶ 자료 : 미국,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고용 창출에 관한 검토(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and Job Creation), CRS, 2019.9

4 미국 뉴욕시, 중소기업 우선정책 정책 통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

- 뉴욕시는 '15년 2월부터 '중소기업 우선 정책(Small Business First, SB1)'을 시행 중
 - SB1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 향상, 규제환경 개선, 기업 오너(owner)의 시간, 자금 및 불편함 감소, 뉴욕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 등을 추진
- 종합 서비스와 지원을 통한 명확한 정보의 제공
 - 2019회계연도 NYC 비즈니스 포털 방문회수는 175만회로 전년보다 20% 증가
 - '19년 6월 방문자는 13만 1천명으로 월간 최다 방문을 기록했으며, 2019회계연도에 만들어진 계정은 12,074개로 전년대비 21% 증가
 -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약 17,600개의 서비스를 중소기업 오너에게 제공
 - 이 서비스에는 라이선싱, 허가, 비즈니스 기술 지원,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과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SBS의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
- 기업들이 뉴욕시의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준수 상담관은 약 2,6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을 하였으며, 3,200만 달러의 벌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
- 복잡한 규제와 벌금에 의한 부담을 완화
 - SB1은 기업 오너, 시의회 및 시 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률과 규칙을 업데이트하고 단순화하려는 노력을 주도
 - SB1 시작 이후 뉴욕시가 징수한 벌금은 30% 이상 감소했으며, 기업 및 상업용 자산의 위반 건수는 10% 감소
- 모든 기업 오너들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
 - SB1은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용어와 지나치게 기술적인 용어를 제거해 문서를 단순화해서 시 전역의 기업에 자료를 제공

▶ 자료 : 미국 뉴욕시, 중소기업 우선 정책(Small Business First) 시행 효과(SMALL BUSINESS FIRST), NYC, 2019.9

5 EU, 중소기업 중 86%가 GDPR을 준수

- '18년 5월 25일에 EU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규정 실시
 - 이전 EU 지침은 권고 차원의 규정인 점에 반해, GDPR은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강행 규정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
- 응답자 중 50% 정도는 기업이 GDPR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36%는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확신은 없는 것으로 조사
 - 기업이 데이터 처리 활동을 명확하고, 평범한 언어로 기술하고 있는가에 대해 44%만이 '전적으로 동의'
 - 보다 놀라운 것은 44%의 응답자가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동의를 얻거나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재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22%를 차지
-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보안의 기술적 측면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기업 리더 중 상당 부분이 법률의 핵심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
 - 예를 들어 응답자의 2/3는 자신의 조직이 엔드투엔드(end-to-end) 암호화 이메일 프로바이더(provider)를 사용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프로바이더 명에 대한 질문에는 단지 9%만이 정확한 이름을 제시
 - 또한 응답자의 50% 이상이 엔드투엔드 암호화 클라우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를 사용한다고 대답했지만 프로바이더 이름은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86%의 기업 리더는 GDPR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
 - 이유로는 ①법이기 때문, ②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③정보보호가 기업에 이익이 되기 때문, ④개인정보보호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기 때문 등을 제시

▶ 자료 : EU, 중소기업의 GDPR 준수에 관한 조사(2019 GDPR Small Business Survey), GDPR.EU, 2019.5

⑥ 독일, 중소기업 전략의 기초는 ‘평가-지원-부담 완화’

- ‘평가-지원-부담완화’의 개념에 근거해 중소기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계획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향후 독일 경제를 선도하고 국제 경쟁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
- 중소기업이 세금 납부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에 대한 조건을 개선
 - △점진적으로 통일세(통일 후 구동독 경제발전을 위해 납부한 세금)를 폐지, △민간 투자, 성장, 고용 활동에 대한 세금 우대책을 통해 국제 세금 경쟁력 확보에 노력, △법인세 부담을 기업 수익의 25%로 줄이는 등 법인세 개혁
-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관료주의 절차 부담을 줄이는 것은 연방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관료 구제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 절차 업무의 단순화를 계획, △문서 보존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디지털화를 활용하여 각종 신고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노력, △EU의 강제 보고 지침을 넘어서는 세금 신고 의무를 폐지, △EU 입법 원칙 ‘Think Small First’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요구 사항이 많이 관철되도록 노력
-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 기업 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계획이 필요
 - △임금의 일반적인 추세와 연계해 최저 임금 450 유로를 상황에 맞춰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디지털화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는 유연한 노동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근로 시간법 개정이 필요,
- 미래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광대역 모바일 등 디지털화 인프라 공급과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용 거래, 인력 확충 및 훈련을 위한 지원을 확대, 지역 중소기업 발전과 국내외 새로운 시장 개척 지원 등이 필요

▶ 자료 : 독일, 정부의 중소기업 전략 기초는 ‘평가-지원-부담완화’(Wertschätzung -Stärkung - Entlastung Eckpunkte der Mittelstandsstrategie), BMWi, 2019.8

7 일본, 중소기업과 대학 간 산학연계는 증가 추세

- 일본의 대학과 민간기업의 공동연구는 산학연계 제도가 정비된 '0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09년도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10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
 - '14~'17년 공동연구 추이를 보면 건수나 금액 모두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으며 건수 기준으로 약 30% 미만, 금액 기준으로 약 20% 미만이 중소기업과의 산학연계
 - 대기업은 공동연구 건수, 금액적인 면에서 모두 중소기업을 능가하지만 '민간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대학과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수치는 상승경향을 보이는 반면 대학과 대기업의 공동연구는 미미하게 감소

- 일본 대학과 중소기업의 산학연계와 관련해 전체적인 공동연구·수탁연구 수용건수가 큰 대학과 중소기업이 제안한 이들 연구를 수용한 건수가 큰 대학 30개를 집계한 결과, 최상위에 랭크된 대학의 면면은 유사
 - 이들은 산학연계의 전체적인 규모도 크지만 동시에 중소기업과의 연계도 활발하게 나타나며, 이들에 비해 산학연계 규모는 조금 작지만 중소기업과의 연계가 활발한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대학'들도 존재
 - 민간으로부터의 공동연구·수탁연구 수용건수에서 중소기업은 비율이 높은 대학 30개 중 25개가 지방대학이었고, 그 중에서도 국공립 대학이 대다수

- 중소기업과 대학 간 산학연계의 효과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과제 해결' '기술융합을 통한 혁신적 제품 탄생'으로 요약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원래 있던 지역 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에도 공헌하며, 대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면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기여
 - (사회적 과제 해결) 홋카이도의 오비히로(帯広)축산대학과 지역 중소기업은 대학의 특허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특허기술 실용화를 위해 대학과 공동연구도 실시하며 '에너지 절약형 퇴비시스템'을 완성
 - (기술융합을 통한 혁신적 제품 탄생) 중소기업은 우수한 제조능력이 있지만 첨단 과학지식을 흡수해 기술을 향상시키는 역량이 부족한데, 산학연계는 양측의 능력을 보완하고 융합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탄생을 지원

▶ 자료 : 일본 중소기업과 대학의 산학연계 효과(産学連携 : 中小企業と積極的に協力する大学および連携プロジェクトの研究), 日本政策金融公庫, 2019.8

⑧ 일본, 중소기업 근무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1.9%

- 일본에서 '04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이 개정되고 '06년 4월부터 고용확보조치가 기업에 의무화된 이후, 일본의 고령자 고용은 새로운 단계에 돌입
 - 후생노동성이 매년 보고하는 '고령자 고용상황'에 따르면, '18년 6월 기준 종업원 31명 이상의 기업 가운데 99.8%는 65세까지의 고용확보 조치를 마련
- 총무성의 '2017년 취업구조 기본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60세 이상 취업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취업자의 21.9%로, 이는 취업자 전체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17.1%)보다 높은 수준
 - 연령별로 보면, 시니어 취업자 가운데 가장 사람 수가 많은 60~64세층은 '02년부터 '12년까지는 계속 증가했지만 '12년 이후 감소
 - 후생노동성의 '2018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남성노동자의 연간임금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 100명 미만의 조직에서 근무하는 고용자의 연간 평균임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
-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가 '14년에 실시한 '60대의 고용·생활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시니어 고용자의 고용형태를 보면, 연령·성별 큰 차이가 존재
 - 남성은 60대 전반·후반 모두 약 30%가 '정사원'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여성은 60대 전반·후반 모두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비율이 65% 전후를 차지
- 시니어 취업자의 커리어 타입을 55세를 기준으로 취업형태나 소속기업과 비교해 '근속형', '지시·지원으로 인한 전직형', '자력 전직형', '피고용 전환형' 4가지로 구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존재
 - 근속형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했지만, 근무처의 종업원 규모가 클수록 근속형 시니어 취업자가 재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
 - 정년을 의식해 50세경부터 취한 행동과 관련해 근속형과 피고용 전환형은 '특별히 없다'는 응답이 70%를 넘는 반면 지시·지원으로 인한 전직형, 자력전직형은 50% 정도를 차지

▶ 자료 : 일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시니어 취업자 실태 및 특징(中小企業セクターで働くシニア就業者), 日本政策金融公庫, 2019.8

9] 일본, 행정수속 비용 20% 삭감 추진

-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2020년 3월까지 행정수속비용(사업자의 작업시간)을 20% 이상 삭감’하기로 결정
 - 행정수속비용 삭감의 3원칙으로 ①행정수속의 철저한 전자화(digital first) ②동일 정보는 1회만 제출(once only) ③서식·양식 통일 등을 제시

- 일본 정부가 행정수속비용을 수치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통해 행정수속을 간소화하는 삭감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
 - 각 부처는 중점분야별로 연간 수속건수가 100건 이상인 수속의 간소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책정(연간 수속건수 기준 커버율: 99.6%)
 - 또한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책정한 수속(1,223가지, 연간 수속건수 합계 약 8,347만 건) 가운데 주요 수속(532가지, 동 약 7,542만 건)에 대해 사업자가 신청할 때 필요한 행정수속비용(작업시간)을 계측(동 커버율: 90%)
 - 이러한 비용계측 결과, 중점분야의 사업자 행정수속 비용은 현시점에서 연간 3억 2,277만 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
 - 이를 사무국이 통계상 산출한 종업원 인건비(급여, 상여, 복리후생비)의 시간단가(2,543엔)를 곱해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8,208억 엔으로 추계
 - 각 부처의 항목별 비용삭감 효과 전망을 추계하면, 이번 작업을 통한 비용삭감 효과는 매년 7,136만 시간(1,815억 엔)으로 예상(삭감률 22.1%)

- 한편 각 지자체가 법률에 입각한 인허가 실무 및 각종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각 지자체의 수속 간소화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보다 큰 효과를 기대
 - 일본 정부의 수속 비용삭감 효과(약 2,000억 엔)와 더불어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수속비용 약 20%를 삭감하게 되면 약 5,000억 엔의 효과를 기대

- 규제개혁추진회의는 현재 행정수속 비용 삭감 실적에 대해 많은 분야의 달성률이 낮다고 판단하고 당초 목표로 한 행정수속 비용 20% 삭감을 실현하기 위해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 자료 : 일본, 행정수속 비용 삭감 추진 현황 및 향후 방침(行政手続コスト削減に向けて- 見直し結果と今後の方針), 内閣府, 2019.7

㉔ 일본, 채용난으로 인재 채용 방식 변화

- 인력채용과 관련해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중소기업으로, '20년 3월 대졸자 구인배율인 1.83배를 상회하는 곳은 300인 미만의 기업(8.62배)뿐
 - 300인 이상 기업은 300~999인 규모의 기업도 구인배율이 1.22배로 거의 구인수와 학생수가 1:1에 가깝고, 5,000인 이상 대기업의 구인배율은 0.42배로 '기업이 학생을 선발'하는 상황

- 중소기업의 채용난은 중도채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제로 과반수의 중소기업은 중도채용을 통해서도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중소기업은 신규졸업자 채용을 통한 인원확보가 상당히 낮고, 중도채용의 경우 미경험자 비율도 44.1%로 300인 이상의 기업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
 - 중소기업은 시니어의 중도채용 비율도 높은 편으로, '18년도 상반기 중도채용을 실시한 기업에서 60대 이상의 중도채용을 실시한 중소기업은 6.3%로 전체 평균인 5.9%보다 소폭 높지만 연령층 편중이 매우 크다는 문제가 존재

- 신규졸업자 채용이 '15년 이후 심각한 수요초과 상황을 보이고 신규졸업자 채용난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채용방식 자체에 큰 변화가 발생
 - 최근 증가하는 것은 '소개' '알선서비스 활용' 'SNS를 경유한 채용' '신규졸업자 대상 확대'로 이들은 이미 중도채용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방식
 - 그동안 대학을 돌며 실시한 홍보활동, 설명회, 면접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신규졸업자 채용이 어렵다는 것이 기업의 새로운 행동을 촉진
 - '20년 신규졸업자 채용과 관련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채용방식을 사용
 - '인턴십 참가자 채용', '종업원들이 소개', '인재알선 서비스 활용', 'SNS를 활용한 직접채용', '신규졸업자 대상 확대(연령, 졸업연도)', '외국국적 학생 채용', '대졸·고졸 등 학력을 구별하지 않는 채용', '신규졸업생·중도채용 구분이 없는 채용', '수시 접수·수시 선발' 등
 - 외국국적 학생 채용실적은 전체의 1.5%에 불과하지만 의욕을 보이는 기업은 신규졸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3.6%를 차지

▶ 자료 : 일본, 장기화되는 인력부족으로 인재채용 방식 변화 조짐(長期化する人手不足は企業の人材採用をどう変える), リクルートワークス研究所, 2019.8

11 일본, 근무방식 개혁과 ICT를 통한 코워킹 스페이스 확대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장시간 노동,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 등 노동과 관련한 많은 과제에 직면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방식 개혁을 추진
 - 이런 가운데 회사 사무실이나 자택 이외의 일할 장소로 코워킹 스페이스가 주목받으면서 최근 도심을 중심으로 코워킹 스페이스가 증가하는 추세

- 코워킹 스페이스는 개인이나 스타트업이 사무실 임대료 감축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근무방식 개혁이나 사외 자원과의 협업 등을 목적으로 대기업이 적극 이용하면서 시설도 대규모화되는 추세
 - 코워킹 스페이스는 '00년 이후 여러 차례 보급 조짐이 있었는데, 일단 2003년 자본금 1엔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한 중소기업도전지원법 성립으로 창업이 증가했던 시기가 대표적
 - '19년 8월 기준 일본의 코워킹 스페이스는 802개로, 도쿄에만 일본 전체의 40%인 320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23개구(區) 가운데 미나토, 치요다, 시부야 등 중심지에만 295개 시설이 몰릴 정도로 도시에 집중

- 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는 근무방식 개혁 움직임을 타고 한동안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도쿄는 '20년까지 빌딩의 대량공급이 지속되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되면 코워킹 스페이스로 이용되는 건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도시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코워킹 스페이스 사업자는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일례로 IoT기술을 활용한 사무실 이용의 가시화 등이 될 것으로 예상
 - ICT 발달로 정보발신이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비교적 용이해지면서 개인의 역량도 확대되고 있어, 향후 기업에서 부업을 촉진하거나 사무실 근무를 고집하지 않은 회사가 늘어나면 개인의 장기간 이용도 늘어날 전망

▶ 자료 : 일본, 근무방식 개혁과 ICT를 통한 코워킹 스페이스 확대 지원(コワーキングスペースの現状と展望 ~働き方改革とICTが拡大を後押し), 情報通信総合研究所, 2019.9

12 중국, 세계 2위 유니콘 기업 보유국으로 성장

-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CB Insight에 따르면, '18년 12월 기준 전세계에 313개 유니콘 기업이 존재하며 상위 5개국은 미국(151개), 중국(홍콩포함 88개), 영국(15개), 인도(14개), 한국(7개)순이며 미국과 중국이 전체의 76.3%를 차지
 - '18년 기준 평가액 100억 달러 이상의 슈퍼 유니콘 기업은 22개이며, 역시 미국과 중국이 각각 12개와 7개로 전체의 86.4%를 차지
- '18년 12월 기준 중국 내 광의의 유니콘 기업은 161개(평가액 7,134.9억 달러), 이 가운데 협의의 유니콘 기업은 137개(평가액 6,524.9억 달러)이며 슈퍼 유니콘 기업은 10개, 신생 유니콘 기업은 54개
 - 지역별로는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선전 등 4개 도시의 유니콘 기업이 전체의 85.7%를 차지하며, 평가액으로는 전체의 94.5%를 차지
 - 유니콘 기업의 성장은 투자기관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으로 세콰이어 캐피탈(紅杉資本), IDG 같은 VC외에 4대 인터넷 기업인 BATJ(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가 유니콘 기업 육성에 주력
- '18년 중국의 유니콘 기업 가운데 상장한 곳은 19개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들의 상장 전 평가액은 10억 달러에서 460억 달러로 다양하며 상장한 시장은 홍콩(8개), 뉴욕(5개), 나스닥(5개), 선전증권거래소(1개) 등
 - 한편 시장의 불확실성, 혁신부족, 수익모델에 대한 의문과 중국의 기업문화, 운영모델에 대한 해외투자자와 자본시장이 이해부족으로 7개사의 최초 가격은 공모가격을 하회
-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소비자 수요가 '상품'에서 '체험·서비스'로 이행하고 중국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책, 벤처캐피탈 기구와 대형 인터넷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 알리바바 등 성공기업의 모델 효과 등이 작용
 - 특히 핵심기술,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전문화 집단은 유니콘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3가지 요인

▶ 자료 : 급성장하는 중국 유니콘 기업 동향과 성장배경(Rule making Innovation)(急成長する中国ユニコーン企業の動向~成長背景と業界分布に注目), 三菱UFJ銀行, 2019.8

13 중국, 산업집적으로 통한 기술진보가 혁신을 추동

- '10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은 정책적인 후원에 힘입어 과학기술 분야도 급속하게 발전중이며 특히 혁신강화촉진책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
 - '12년 독일발 인더스트리4.0에 자극을 받아, 중국도 제조업의 전면적인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제정·실시하며 혁신촉진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혁신 추진을 위한 정책들이 실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경제·기술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중국산업발전보고서 2018'은 최근 5년간 중국의 혁신구동(驅動)을 통한 발전을 다음과 같이 평가
 - 전반적인 과학기술 실력이 대폭 향상되고 일부 분야에서 기존의 추격자가 아닌 경쟁자, 나아가 선도역할을 수행
 - 혁신기업이 급성장하고 산업발전을 하이엔드, 그린, 개방, 융합적인 방향으로 리드하고 있으며, 혁신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경제구조 전환과 사회발전에 촉진적인 역할을 수행
 - 혁신의 톱디자인(상층부의 의사결정)이 개선되고 재정지출, 창업확대, 성과이전, 인재육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창출
 - 혁신의식이 대중에게 침투되고, 새로운 혁신이념이 전면적인 혁신시대로 유도

- 중국의 혁신이 발전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산업집적에 따른 기술진보로, 많은 국내외 우량기업이 입지한 국가급 고신구(高新区-하이테크존)의 신규 등록기업 수 급증을 통해 산업집적지의 창업 붐을 극명하게 확인 가능
 - 전국 157개 국가급 고신구에는 외국기업도 입지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기업도 증가할 정도로, 중국을 '공장 + 시장'을 넘어 기술개발센터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전개하는 장소로 선택
 - 또한 '13년 이후 고신구 내에 인큐베이터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벤처투자나 스타트업 기업 탄생이 활발하게 전개
 - 국가급 고신구는 외자유치와 기술도입 촉진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중국 기술이전이나 기술진보 및 혁신발전에도 중요한 촉진제로 기능

▶ 자료 : 중국의 혁신전략 전개 동향 및 그 성과(中国イノベーションの成果・課題と将来展望), みずほ銀行, 2019.9

14 동남아시아, 디지털화를 통한 중소기업 연결 필요

- 동남아시아 지역은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통합과 관련하여 디지털 혁신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극복해야 할 여러 과제에 직면
 - 공급 측면에서의 주요 과제는 연결성이며, 지금까지 광대역 배치는 대부분의 동남아시아A 국가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디지털 전환이 불가능
 - 수요 측면에서는 또다른 규제 프레임워크들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필수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혁신을 방해하는데, 그중에서도 금융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중요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소기업이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국경 간 규제 및 정책을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
 - 고정 및 모바일 광대역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저렴하고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장을 위해 연결성을 위한 제도 및 규제 프레임 워크를 강화하고, 일관성 있고 명확하며 투명한 원칙에 기반한 규제 및 정책을 시행
 - 사람과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중소기업에 의한 디지털 서비스의 효과적 사용을 확대
 -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재평가하여 혁신을 촉진
 - 취약한 농촌 인구의 디지털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및 사용을 늘리고, 성별 디지털 격차를 해결해 포용성을 향상
 - 디지털 보안 위협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체 사회 관점에서 개인 정보 보호 및 디지털 보안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디지털 도구 및 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뢰를 강화
 -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거래를 구분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의 장벽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촉진
 - 지역 통합, 지역 연결 인프라,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SEA 지역에서의 경험 공유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간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마찰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간 연결을 개선

▶ 자료 : 동남아시아, 디지털화를 통한 중소기업 연결(Southeast Asia Going Digital - CONNECTING SMEs), OECD, 2019.7

III 주요일정



1) EntreLeadership Master Series (미국 네쉬빌, 2019.11.3.~7)



- 본 행사는 500명 이상의 기업가 및 리더들이 참가하며, 시간관리·코칭·전략 수립 및 수행·의사결정 등 기업가 본인과 조직 그리고 사업을 성장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전략들에 대해 4일 간의 강의, 세션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 연락처 : 1-844-445-2705
- URL : <https://www.entreleadership.com/ems>

2) Web Summit (Lisbon, 2019.11.4.~7)



- 스타트업, 정책 입안자, 국가 책임자의 설립자 및 CEO 등 70,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본 컨퍼런스는 빅데이터, AWS, AI, 머신러닝, 클라우드 등 미래의 글로벌 기술 산업을 재정의할 수 있는 최신 기술에 대한 강연, 워크샵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 연락처 : info@websummit.com
- URL : <https://websummit.com/>

3) Ignite 19 Europe (스페인 바르셀로나, 2019.11.13.~15)



- 본 컨퍼런스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최첨단 기술을 직접 학습할 수 있는 워크샵, 기조연설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PCNSA, PCNSE 인증을 위한 학습 세션과 자격 시험을 통해 인증 획득 기회를 부여
- 연락처 : igniteeuropeconf@paloaltonetworks.com
- URL : <https://igniteeurope.paloaltonetworks.com/>

④ 9th Philippine SME Business Conference 2019 (필리핀 마닐라, 2019.11.13)



-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본 컨퍼런스는 필리핀의 중소기업이 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품 전시 및 기업 소개를 할 수 있는 B2B 엑스포와 강연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 연락처 : sunshine@philsme.com
- URL : <https://www.philsme.com/>

⑤ Hypergrowth (미국 샌프란시스코, 2019.11.18)



- 본 컨퍼런스는 대화 마케팅을 사용하여 이벤트, 이메일, 콘텐츠, ABM 등 10가지가 넘는 마케팅 영역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기조 연설과, 세션 그리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 연락처 : (855) 266-1567
- URL : <https://hypergrowth.drift.com/>

⑥ Slush (핀란드 헬싱키, 2019.11.21.~22)



- 25,000명이 참여하는 Slush는 글로벌 기술 현장의 주역들을 연사로 초청해 4개의 트랙에서 다양한 세션을 진행하며, 스타트업 창업자 및 기술력 있는 인재가 국제 투자자 및 임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연락처 : hello@slush.org
- URL : <https://www.slush.org/events/helsinki/>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Global SME Policy Trend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발행인 :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편집위원 : 전인우 부원장, 김광희·백필규·심우일 수석연구위원 등

주소 : (0707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

전화 : 02-707-9800, 팩스 : 02-707-9894

홈페이지 : <http://www.kosbi.re.kr>

문의처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 02-707-9873

인쇄처 :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02-2279-9241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